

16 서울 都市計劃의 過去와 將來 서울 도시계획의 과거와 장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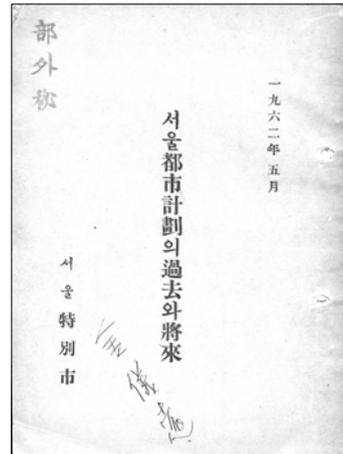
1962년 / 김의원 / 65면 / 02.10-20 서67서 1962

1962년 5월에 발행된 65면의 ‘대외비’ 문서다. 이 문서도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근무하던 필자가 쓴 글이다. 이 문서는 『都市計劃白書(도시계획백서)』를 발표하기 전에 도시계획에 대한 시장의 시정방침을 밝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.

이 문서의 머리에 밝힌 서울특별시장의 인사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혁명정부의 부정과 부패를 일소한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다.

시장의 인사말에서는 서울시정의 개혁사항 중 가장 비중이 큰 분야가 도시계획 분야라고 밝히고 있다. 종래의 도시계획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힘 있는 사람들의 치부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. 더욱 심한 것은 일제강점기 때 그어 놓은 도시계획 선이 아무런 비판도, 반성도 없이 그냥 답습되고 있을 뿐 아니라 도시계획을 무시하고 정부청사들을 건립하는가 하면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계획으로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뼈아픈 실정의 회고라고까지 말하고 있다.

이러한 관점에서 이 책의 목적은 과거의 도시계획을 해부하여 도시계획의 근본적인 수정을 단행함과 동시에 『都市計劃白書』를 발표함에 앞서 먼저 서울도시계획 시정지침의 개요를 시민 앞에 공개하여 기탄없는 비판을 받고자 하는 데 있다. 1961년 말 서울시



인구는 268만 명이였다. 이 문서에 따르면 서울시의 부족한 주택 수는 21만 3,000호였고 개량이 시급한 주택은 약 6만 호였다. 1961년 현재 이른바 ‘셋방’ 세대수는 약 20만 세대였다. 이 당시 약 100만 시민은 상수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.

건축행정이 토목과에서 도시계획과로 이관된 것이 1948년 2월이었다. 이 당시 건축행정의 난맥상을 나타내는 지표 가운데 도시계획을 무시한 제조업(공장) 건축허가 건수가 893건이나 되었다는 것이다. 당시 서울시내에 건축대서사는 67명에 불과했는데 연평균 건축허가 접수건수는 7,400여 건에 달하였고, 건축대서사 자격부여는 1948년과 1955년의 두 번밖에 없었다. 건축대서사의 자격은 건축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의 임의 선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.

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는 납세필증과 국채소화필증, 그리고 심지어 상수도요금 납부필증까지 붙여야만 했다. 이 당시 대표적인 가건물은 세종로 네거리의 국제극장(지금의 동화면세점), 감리회관, 박용래 소아과병원, 파고다공원 내의 호텔, 남산의 승의여고와 신신백화점(제일은행본점) 등이었다.